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

2023. 1. 4.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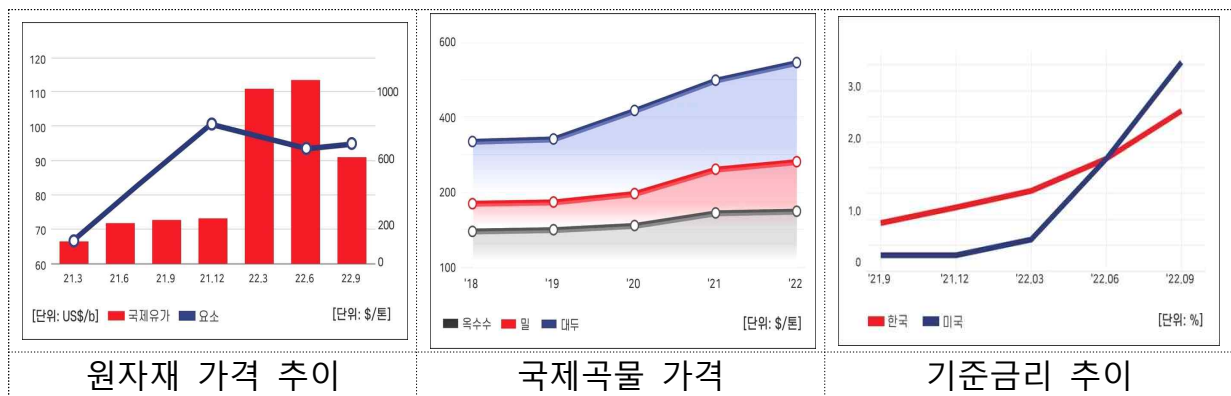
순서

I.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대내외 여건 및 농정방향	1
II. 지난해 농정 추진성과와 과제	2
III. 2023년 농정 추진여건 및 정책방향	4
IV. 2023년 핵심 추진과제	5
[참고] '23년 중요 대책 발표 일정(안)	16

I.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대내외 여건 및 농정방향

□ 윤석열정부 농정은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출범

- 코로나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 공급망 불안, 원자재·곡물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은 농가를 압박
-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적구조 변화와 환경부담, 탄소중립 등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미흡
 -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심화, 농업의 낮은 생산성 및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농촌 활력 저하



□ 이러한 대내외적 악조건에 대응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대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주권, 농가경영 안정 및 농산촌 지원 등을 농업분야 국정과제로 채택
-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비정상 사례 및 현장애로 적극 발굴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정책, 조직, 규제, 업무 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이행

- 윤석열정부 농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농정비전과 농정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혁신
- 시장, 경쟁, 자율, 창의 등의 핵심 가치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차질없이 마련

⇒ 지난해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적 충격에 따른 농업현안을 충실하게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화 등 본격적 성과창출 기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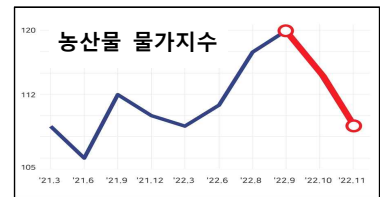
II. 지난해 농정 추진성과와 과제

1 주요 정책 성과

□ 식량안보, 농산물 수급 안정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성과 창출로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 슬기롭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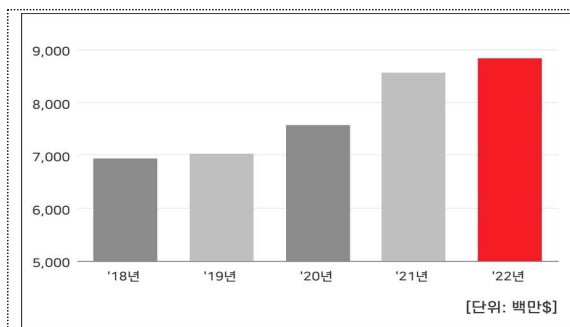
○ 가루쌀 산업 활성화('22.6월~)를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 기반 마련

○ 원자재 가격상승 등 공급분야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22.11월, 전년 수준 회복)



○ 글로벌 물류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 애로 적시 해소 등으로 '22년 농식품 수출액 88.3억불(잠정)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농업 ODA규모 지속 확대, 식량위기국에 매년 쌀 5만톤 원조, 네팔에 젓소 101마리 및 유전자원 지원('22.12) 등 공여국 역할



농식품 수출 실적



'네팔로 101마리 젓소 보내기' 환송식

□ 청년농 및 스마트농업 중심의 농업구조 대전환을 통해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 안정 대책 발표('22.10.5.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마무리 단계

-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제도로 평가

-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통해 미래 농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 등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10년만에 농식품부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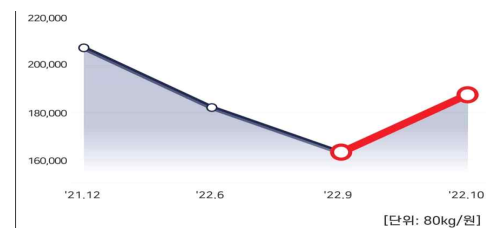
- 식량안보, 농식품혁신을 축으로 1급 조직을 개편하고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청년농·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담 부서 신설로 신산업 육성 기능 강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22.10.5.)>

□ 쌀값 안정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로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

-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쌀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확정·발표하여 '21년 수확기 이후 하락하던 쌀값이 대책 발표 직후 16.7% 상승



<산지 쌀값>

- 실경작자 구제를 위한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로 지급대상 확대(추가 56만명)
* '17~'19 농지요건 삭제를 위한 법률 개정 완료, '23년 지급을 위한 예산 3,000억원 확보
- 10년만에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음용·가공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 적용) 도입으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2 미흡한 점

-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22.12.28.)

*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의무화

- 유럽·미국·일본 등 전 세계적 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도 '22.10.17. 첫 발생 이후 현재 총 59건('23.1.2.기준) 확진

- 농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가·계열사-단체 책임성 강화 및 민간 검사기관 활용 등 민관협업 체계 구축

Ⅲ. 2023년 농정 추진여건 및 정책방향

1 대내외 여건

- 러-우 전쟁 이후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주요 곡물 생산이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식량안보 문제 상시화 우려
 - 식량 공급 부족 등 농산물 수급 불안 시 생산자·소비자 어려움 가중
-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 불안 등에 따른 위협이 상존하나 기회도 존재
 - 영세한 경영규모, 낮은 기술 수준 등이 생산성을 낮추고 있으며, 오프라인 중심의 복잡한 농산물 유통경로는 비효율 유발
 - * 농업 노동생산성(원/시간) : ('17) 21,444 → ('18) 18,003 → ('19) 16,912 → ('20) 17,990
 - 중소농 등 취약계층은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 등에 대한 대응력 취약
 -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2 정책목표 및 주요 과제

- ◇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매력적 농촌공간조성 및 동물복지강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과제 중점 추진
- ◇ 농업혁신, 자율, 창의 등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연대·상생협력) 강화

	[여건]	[정책목표]	[핵심과제]
식량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교란 ○ 만성적 쌀 과잉 ○ 곡물자급률 하락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1-① 식량자급률 제고 1-②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 산업구조 ○ 고령화, 인구감소 ○ 고용 창출력 부족 	2.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2-① 스마트농업 확산 2-② 미래 신산업 육성 2-③ 수출 및 ODA 확대
농가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비 급등 ○ 가격 급등락 ○ 기후위기 심화 	3.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3-①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3-②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농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멸 ○ 농촌 난개발 ○ 복지전달체계 약화 	4.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4-①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4-②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4-③ 동물복지 강화
기반	농업혁신, 자율, 시장, 연대협력		

IV. 2023년 핵심 추진과제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1-1 식량자급률 제고

- ◇ '23부터 주요곡물 자급률 상승세 전환으로 '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
 - 국내 생산 및 비축 확대, 안정적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식량안보 정책지원 대폭 확대(관련예산 '22: 1,972억원 → '23: 3,489)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 주요곡물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
 - * 전략작물직불제: 동계(밀·조사료) 및 하계(콩·가루쌀) 작물 이모작 시 250만원/ha
-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여 대규모 집중생산체계 구축
 - * 전문생산단지('22 → '23, 개소): (가루쌀) 신규 39, (밀) 51 → 73, (콩) 122 → 170
-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전 과정 지원
 - * '23. 소비활성화 : 가루쌀 신규 40억원, 밀 22억원
- 생산 확대에 대응하여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설치('23. 예타추진), 가루쌀 공공비축미 매입 신규 추진('23. 1만톤) 및 밀·콩 공공비축 확대
 - * 공공비축물량(가루쌀 / 밀) : ('22) 0 / 17천톤 → ('23) 10 / 20

□ 해외 공급망 확충을 통한 국내 반입 확대('21: 61만톤 → '23: 70 → '27: 300)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27: 5개소) 지원('23: 500억원)
 - 해외 확보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
 - *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 마련(해외농업산림법 개정, '23.)
- 남미 등 곡물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협정 체결, 민간 주도로 현지에 생산-유통-국내반입 기반을 구축하는 패키지사업 추진
 - * 대상국가 선정 및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3~)

1-2 농업 생산성 향상

◇ 비농업부문 기술·자본 활용을 위해 기업적 경영방식 도입

□ 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방식 도입 및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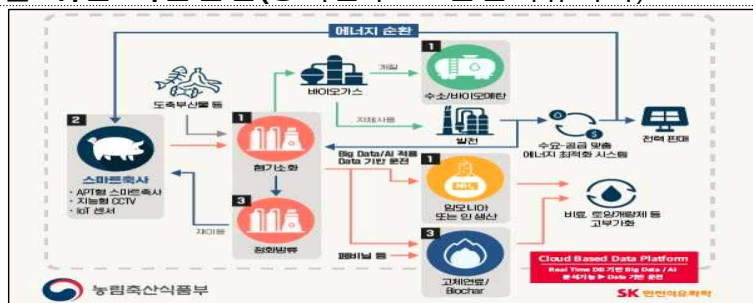
-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 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 확대('23.下)
 - *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혜택 확대(기재부 협의) 및 정책지원 확대
- 농업법인 설립·운영 시 비농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
 - *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설립준비), 영농조합법인 임원(사업경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3)
- 농식품 펀드 2,000억원 이상 신규 조성('18~'22: 7,200억원 → '27: 1조원 목표)
 - 세컨더리 펀드* 추가 결성('23: 200억원),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 도입**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 * 투자 후 기업 상장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자금을 유동화하기 위해 다른 펀드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구주매입), 출자자(L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22년까지 총 2개, 720억원 결성 완료)
 -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23)

□ 기업의 자본력·기술력을 활용한 성공사례 창출

- 기업이 농업 전후방산업의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기술협업(농식품부-SK인천석유화학)

- ▶ 기업이 가진 ICT·IoT 스마트 제어기술, 악취 등 환경제어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통합제어기술 등 기술협업
-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IT기술을 활용한 통합 환경제어로 악취 저감, 축사폐수 정화처리 효율성 제고



□ 농업기술 개발, 생산기반 정비 등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

- 기후 변화, 기계화 전환 대응 맞춤형 우량 품종* 개발('23.下~)
 - * 내병성 품종(고추·토마토·파프리카 등), 기계수확 시 상처 최소화 품종(마늘·양파 단단함↑)
- 밭농업 기계화 모델 개발('23: 6개소) 및 정밀도 향상('23: 49억원)
- 홍수 대비 시설보수('23: 324지구), 중·소 저수지 치수 능력 확대('23: 2)

②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2-1 스마트농업 확산

◇ '27년까지 온실·축사의 30%를 스마트화

- 농업인 기술 역량 제고, 스마트 시설 지원, 현장 중심형 기술 개발 추진

□ 농가의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및 청년 창업 유도

- 기업-농가 컨소시엄을 통한 현장 실증 확대('22: 23개 기업 → '23: 46),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1:1 멘토링 확대('22: 330명 → '23: 380)
-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 대상 인턴형 실습교육 도입('23.7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확대('22: 300명 → '23: 500)

□ 노후시설 스마트 팜 전환 및 집적단지 조성

- 주산지 기존 온실 자동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23: 신규 3개소) 및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23: 신규 3개소) 조성
- 「시설노후 + 주거지인접」 축사를 이전부지에 현대화하여 신축하고, 환경·사양관리 등 스마트 축사 장비 설치 지원(신규 1개소)



- 대규모 첨단온실 조성 및 연관산업 집적화('23. 연구용역 추진)
* (구상안) 파프리카 등 재배단지 75ha, 스마트팜 R&D·실증 25ha 등 100ha 규모 조성

□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자동화→지능화) 및 제도적 기틀 마련

- 디지털기술 활용 온실·축사 R&D('21~'27: 3,867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 R&D('22~'24: 438억원) 추진,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 새만금 간척지 100ha에 자율주행전기·수소 등 논밭 주행 실증단지 조성('23~'26, 1,092억원)
- 「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 완료 및 하위법령 마련('23.下)
* 육성지구 지정, 기술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2-2 미래 신산업 육성

◇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

- 기술개발·규제완화·시장조성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 극대화 유도

□ 식품과 IT·BT·AI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푸드테크 신산업 육성

- 핵심기술 선정('23.1월),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연구 개발('23.9월 예타추진)
-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발굴·육성 지원 강화
 - '23년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27: 1,000억원), 식품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정보 DB화('23~'24)
- 푸드테크 육성 법률 제정('23.12월),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정비('23.6월 식약처 등)

□ 종자, 기능성·바이오 소재, 합성생물학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기업이 필요로 하는 12대 핵심기술 R&D 확대('23: 1,184억원, 양청 포함)
- 스타트업 종합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확충('23.6월~, 신규 1)
- 6대 분야* 허브를 중심으로 창업자금**, 기능성 평가 등 전 주기 지원
 - * ①종자, ②미생물(식품, 바이오농약·비료), ③동물용의약품, ④곤충, ⑤천연물, ⑥식품소재
 - ** 창업 전용 펀드 추가 결성('23: 200억원) 및 특화 엑셀러레이터 선정('23: 1개사)
- 규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벨류체인 전 단계 개선과제 발굴('23.4월~)

□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개발 R&D* 추진('23: 90억원)
 - * ① 피부질환 기능성 사료, ② 인공관절, 혈액 대체제, ③ 면역 치료제 등
- 동물 진료비 게시 및 사전 고지제도 시행('23.1.5.),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도입('23. 시범사업) 등 반려동물 서비스 품질 개선
- 펫푸드 특화 분류·표시 방안 마련('23.3월) 및 동물장묘업 규제개선*
 - * 이동식 화장장 설치(시범사업, '22~'24), 동물장례식장 거리제한 완화(동물보호법 개정, '23)

2-3 수출 및 ODA 확대

◇ 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및 한국형 스마트팜 신시장 진출

- 수출업체 조직화로 물류·마케팅 효율성 제고 및 기술경쟁력 확보
- ODA 등 국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기여 및 수출 저변 확대

□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구성·운영

-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aT, KREI, 농진청 등), 단체(농기계협회, 종자협회 등) 등으로 구성
-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 지속적 수출동력 창출

□ 수출시장 다변화로 '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 해외 수요를 고려한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
 - 수출 통합조직 확대('22: 10개 → '23: 12), 신제품개발 등 생산부터 시장개척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23.6월)
- 비용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 물류 규모화를 위한 공동포워딩^{*}을 시범추진(50여 개 딸기 수출업체)^{**} 하고('23.5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모델 마련('23.下)

* 공동포워딩 : 개별 수출업체가 아닌, 단일한 조직이 전체 수출물량 대상으로 운송사와 운임 등을 협상하고, 공동으로 화물의 포장·적재·보관·운송·통관 등을 조정하는 방식

** '22.11.~'23.5월까지 딸기 약 5,100톤 수출, 물류비 25억원 절감 예상

- 선도유지 시설·장비 이용료 지원('23.3월), 수출 성장세가 높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콜드체인 구축 지원 확대*('23.7월)

* ('22) 중국, 베트남, 태국 → ('23) + 싱가포르, 네덜란드

□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 활용, 한식이 주도하는 K-Food 수출 확대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활성화**
(뉴욕·파리·도쿄 등에 신규 20개소),
수출 전략품목별 한식메뉴-스타셰프
매칭('23.3월) 및 해외 홍보



· World's 50 Best Restaurants 최초
한식당 선정 : 아토믹스(美 뉴욕 맨하탄 소재)

- 해외 파급력이 높은 드라마·예능 등 한류 콘텐츠 내 간접광고, K-팝
스타 콘서트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홍보(CJ E&M 협업, 연중)

□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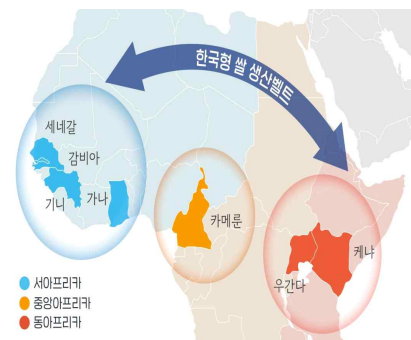
- 국가별 기후·환경에 특화된 데모 온실 구축('23. 신규 1개소), 기자재
·전문인력 패키지 진출 거점으로 활용
* (~'22) 베트남, 카자흐스탄 → ('23) 호주(기 선정), 신시장 신규 1개소
- 해외 건설 등 타산업 분야와 교류·소통 체계 구축
-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22: 30건 → '23: 60)
- 현지 KOTRA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체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실증 로드쇼 개최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 K-농업 해외전파를 통한 국격 제고 및 기업 진출 기반 마련

- 식량·농업기술 등 인도적 지원 및 ODA·국제협력 확대

①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7개국에 K-Rice Belt 구축 추진('23~)

- * 대상국과 사업협력 MOU 체결, 현지 타당성조사
및 신규사업 추진('23.上~)
- 중고 농기계 시범 지원 및 수리센터·
임대사업소 설치 추진('23.上, MOU 체결)



② 중동 등 국가별 맞춤형 선진 농업기술 전수 및 수출 거점화

- 중동(물 절약 및 냉방 기술), 동남아시아(쌀기 등 K-Food 재배기술), 중앙
아시아(스마트팜 AI 솔루션, 건조지역 복원), 남미(선진 산림녹화기술) 등
- 농기업과 ODA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축*,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등을 활용하여 가축·농업생산·기술·농기계·산림협력 등 지원 강화
* 농식품부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확대, 범부처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농업분과 신설

③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3-1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 농자재·금리·인력 등 농가의 경영 위험 요인 관리체계 강화

□ 직불제, 재해보험 등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및 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 마련('23.2월),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추진

* '23년부터 56만명에게 3,000억원 추가 지급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3개 추가) 및 보장 수준 제고*

*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85·90% 보장형) 운영 품목 확대(27개 → 31)

□ 농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

-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지원('22.10~12월 사용분, 151억원) 및 에너지 절감 시설 국고 보조율 상향(20%→25)

- 농업인 무기질비료 및 사료 구입 지원,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약 2,700억원), (사료) 1조원 규모 저리(1.8%) 융자

- 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23.1월~, 9,800억원) 등 금융부담 완화

□ 국내외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 체계 구축

-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부 협업사업 추진('23p. 5만명)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 수요조사 및 작업반 구성 ▶ 농작업 교육, 인력관리	▶ 지자체-고용센터 연계 ▶ 전자근로계약 지원	광역 ▶ 근로인력 모집 기초 ▶ 공동숙박, 교통지원

- 외국인력 공급 규모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 본사업 추진

*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상반기) : ('22) 9,550명 / 16,924명 → ('23) 14,000 / 24,418

- 농업인력 지원정책 추진 및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23)

3-2 유통 선진화 및 수급 안정

◇ 유통비용 절감 및 수급안정 도모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 소비지 요구에 맞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구축('23: 15개소 → '27: 100)



* ① 산지 상품화 과정 자동화, ② 상품거래 정보 디지털화, ③ 전·후방 산업과 정보 공동 활용

-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23.12월), 거래 품목 단계적 확대
 - * 거래소 유통 물량 목표 : ('23) 8만톤(주요 품목 도매거래량의 2%)→ ('27) 80(20)
 - * 한국농식품온라인거래소법(가칭) 제정('23.下)
-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전자거래 체계로 개선('23.8월: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 '27:의무화)하고 출하·구매 예측시스템 구축('23.10월, 가락시장)
-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지원센터* 구축('23: 20개소)
 - * 상품화·마케팅 및 주문·배송·정산·C/S 등 온라인 직거래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농산물 생산·유통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유통정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3~'24)

□ 주요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수급 조절 정책 추진

- 가격 변동성이 높은 원예 품목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확대('22: 17% → '23: 23) 및 출하조절시설 확충('22: 7개소 → '23: 8)
 - * 계약재배 농업인은 수급 조절 의무 이행, 가격하락 시 손실의 일부 보전
- 공급과잉인 쌀은 벼 재배면적 감축('22: 727천ha → '23: 690) 및 다수확 품종 감축, 작황 상황 고려 선제적 쌀수확기 대책 수립
- 자조금 활용 한우 할인행사 확대('22: 43억원 → '23: 100), 암소 14만 마리 선제적 감축,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제고
 - AI 발생 상황에 따라 신선계란 및 병아리 탄력적 수입
 - * 설 성수기 대응을 위해 '23.1월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 시범 수입 예정

④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4-1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 농촌주민,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

- 지자체·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23.12월),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 농촌지역을 주거·융복합산업·관광·재생에너지 지구 등으로 특화 발전 유도
- 정부-지자체간 '농촌협약*' 체결 확대 및 통합지원('23.7월)
 - * 농촌공간계획 추진을 위해 시·군은 농촌공간계획 이행, 정부는 통합예산지원
 - 협약 체결 확대('22: 32개 시군 → '23: 53), 통합지원 사업 확대(주거여건 개선 등 → 일자리·경제·사회서비스 포함)



축사 등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된 농촌



정주기능이 강화된 농촌마을보호지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에 관한 법률' 제정('23.6월)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방안 구체화
 - * 농촌마을보호지구(유해시설 건축 금지), 축산지구, 농촌산업지구 등으로 구분

□ 농촌지역의 자원·문화 등을 활용하여 농촌 재생

- 농촌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상품개발 지원('23.12월)
 - * 농촌체험휴양마을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캠핑이 가능토록 관련 규제 개선(문체부 협조)
- 농촌 취약마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주택 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
 - 빈집 등 노후주택 정비('23: 14천호), 목재친화마을 조성('23: 9개소)

4-2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 육성

□ 농촌형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 문화·복지 등 복합 서비스 거점을 조성('22: 797개소 → '23: 900)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확대
-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사회적 농장 육성('22: 83개소 → '23: 100) 및 농촌 돌봄마을 조성('23. 3개소)



< 농촌 돌봄마을 >

- ▶ 고령층 등 주민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을 복합화
- ▶ 전문 의료·보건, 학교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 제공

- 보건·의료정책과 농업·산림치유를 연계하여 국민 건강 비용부담 완화
* 치매예방, 재난심리회복 등을 위한 치유의 숲 확대 : ('22) 45개소 → ('23) 52

□ 농촌의 돌봄·의료·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서비스 공동체 육성('22: 22개 → '23: 30)
-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 개편,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방문 진료 등 농촌형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23.11월, 복지부 협조)
- 주민 등이 연대·협력하여 사회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3)

4-3 동물복지 강화

◇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

- 학대·유기 등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정책 확대 및 사후조치 실질화
-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 반려동물 양육자 돌봄의무* 강화 및 입양 전 교육** 확대
 - *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주인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짧은 목줄 금지 등('23.4.)
 - ** 입양예정자 대상 온라인 강의('22) → 산책·배변 등 펫티켓 현장실습 제공('23~)
-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22: 34억원→'23: 38) 및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23.4.)
-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및 준수사항 강화(건강상태 확인 등),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23.4월)
- 맹견·사고견을 관리할 수 있는 기질평가제 도입('23: 시범사업 → '24.4월 시행)

□ 피학대·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및 입양 등 사후조치 실질화

-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마련('23.上)
- 유기동물 보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23. 신규 11개소), 민간 동물 보호시설 개선('23. 18억원) 및 전문입양센터 신설('23. 2개소)
 - *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도입('23.4.)에 앞서 입지·시설 등 개선방안 마련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사회적 수용성 등 추진기반 마련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上 연구 → '23.末 법안 마련)
 - * (동물복지 요소) 돌봄의무 강화, 생산·판매 제한 등, (법체계) 맹견법 등 분법 검토
- 동물보호단체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 협업 강화('23~)
- 양육·돌봄 실태 등 동물복지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 *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 및 조사방식 개선('23~)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반려동물영양·동물실험 등 정보 연계·통합('23. ISP수립)

참 고

'23년 중요 대책 발표 일정(안)

발표시기	중요 대책(안)	소관
1월	'23~'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정책국
	'23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시행계획	농촌정책국
	쌀 적정생산 대책	식량정책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농업정책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식품산업정책관
	농업 ODA 추진전략	국제협력관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계획('23~'27)	농식품혁신정책관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축산정책관
2월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식품산업정책관
	'23년 밀산업 육성 시행계획 마련	식량정책관
	'23~'32 10개년 생산기반정비계획	식량정책관
3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	농업정책관
	농촌 빈집 대책	농촌정책국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방안	유통소비정책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봄철 방역대책	방역정책국

	제4차 식품산업기본계획 수립	식품산업정책관
	제3차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	식품산업정책관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직불 확대·개편 로드맵	농업정책관
4월	국토녹화 50주년('73~'23) 산림 100년 비전 선포	산림청
6월	'2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농촌정책국
7월	축산분야 탄소중립 방안	축산정책관
8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9월	특별방역대책	방역정책국
10월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식량정책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유통소비정책관
11월	해외농업자원 비상시 반입제도 개선방안	국제협력국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4~'28)	식량정책관
12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	농촌정책국
	농산물 거점 물류 허브 구축방안	유통소비정책관